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趙 德 天*

국문초록

이 글은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례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재정·군사·외교 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다. 첫째, 재정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신속하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기 동안 많은 자금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둘째, 군사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통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대했다. 셋째, 외교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 승인’을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뜻을 펼쳤다. 하지만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는 없었다. 요컨대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는 자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호응해 재정·군사·외교 지원을 실시했다.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근대 한·중관계’·‘한·중 공동항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한다.

[주제어] 중일전쟁, 독립운동, 한·중 공동항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화민국 국민정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한국의 국제지위 확보에 대한 외교 지원 |
| II.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 V. 맺음말 |
| III. 한국광복군에 대한 군사 지원 | |

* 復旦大學 歷史學系 高級進修生 / cando260@hanmail.net

I. 머리말

1937년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한국과 중국은 '일제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개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한국의 혁명세력은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여했고, 중국의 혁명세력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한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 국민정부(이하 중국국민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수행했다. 이때 한국임시정부는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환국하기 직전 고별서를 발표해, '抗戰八年'간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¹⁾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사와 근대 한·중관계사, 더 나아가 '韓·中 共同抗戰史'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그 중요성만큼 이 방면의 연구는 한·중학계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뒀다.²⁾ 관련 연구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행돼 왔다. ①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국민정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지원 문제를 언급한 연구,³⁾ ② 한국임시정부의 '對中國外交'를 분석하면서 지원 문제를 언급한 연구,⁴⁾ ③ 중국국민정부의 '對韓政策'을 분석하면서 지원 문제를 언급한 연구,⁵⁾ ④ 중국국민정부의 한국임시정부 지원 문제를 단독주제로 다룬 연구 등이 있다.⁶⁾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발견된다. 한국학계에서는 한국임시정부가 중국국민정부로

- 1) 「大韓民國臨時政府主席金九致中華民國朝野人士告別書」, 『(重慶)大公報』, 1945년 11월 6일자(秋憲樹 編, 『資料韓國獨立運動』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470쪽).
- 2) 中國國民政府가 韓國臨時政府를 지원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 성과들은 상당히 많다. 이 글에서는 관련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만을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 3) 胡春惠, 「中國與韓國臨時政府之關係」,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1972; 추헌수, 「大韓民國臨時政府和 中國과의 關係」, 『韓國史論』 10, 國史편찬위원회, 1981; 한시준,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국사관논총』 47, 國史편찬위원회, 1993; 최봉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정부의 관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7; 장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謝俊美, 「抗战时期中国国民政府与韩国独立运动」,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 武菁, 「抗战时期国民政府与韩国独立运动」,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8; 张玉红, 「中国国民政府与大韩民国临时政府关系研究」,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2010; 배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1~1945)」,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 4) 홍순옥,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1940~45)試論」,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85; 장세운, 「中日戰爭期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 5) 장세운, 「1940년대 전반기 중국국민당 정권의 한국독립문제 인식과 대응」, 『韓國近現代史論叢』, 吳世昌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5; 구대열, 「2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 한국정치학회, 1995;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 6) 任秋山, 「大韓民國臨時政府에 對한 中華民國의 支援政策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任桂淳, 「大韓民國臨時政府에 對한 中國政府의 支援」, 『한국사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李東瑞, 「中國의 韓國臨時政府支援政策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石源華, 「論戰時中國國民政府的援助政策」, 『朴永錫教授華甲紀念獨立運動史論叢』, 탐구당, 1992; 方永春, 呂秀一, 「中国对在华大韩民国临时政府的援助」, 『近代史研究』, 1994; 黃兴, 「论中国国民政府对韩国临时政府的援助」, 苏州大学 硕士学位论文, 2003; 王琦, 「中国国民政府援助韩国独立运动的缘起和发展」, 安徽大学 硕士学位论文, 2007.

부터 지원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석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학계에서는 중국 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실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데에는 자료의 제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학계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발굴됐다. 하나는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을 완료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이다.⁷⁾ 여기에는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영인·번역돼 있다. 다른 하나는 2014년 한국학계에서 발굴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에 수록된 카이로회담 관련 문서이다.⁸⁾ 여기에는 카이로회담 전후 중국국민정부가 ‘韓國問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로써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 글은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국민정부의 지원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별로 크게 세 가지 사례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② 한국광복군에 대한 군사 지원, ③ 한국의 국제지위 확보에 대한 외교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례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이다. 이를 통해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구체적인 실상과 더불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확보였다. 한국임시정부가 재정을 확보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미주지역의 한국교포들에게서 지원을 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임시정부의 최대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국민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⁹⁾ 이 가운데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광복군이 성립된 이후 귀순하는 ‘韓籍土兵’의 수가 날로 늘어나 이들을 보조할 자금이 필요했으며,¹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주지역 한국교포들이 보내오는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했고,¹¹⁾ 해마다 물가까지 크게 오르는 등¹²⁾ 한국임시정

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전 51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2011).

8) 秦孝儀 主編, 「開羅會議」,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491~557쪽(이하 ‘秦孝儀 主編, 「문서명(일자)」, 쪽수’로 표기함). 이 자료가 한국학계에서 발굴되어 주목 받게 된 사실은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128쪽 참조.

9)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후반기(1932~1945)의 재정제도와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276쪽.

10) 「金九—朱家驊(1941.09.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94쪽.

부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에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재정 지원 요청에 호응했다. 처음에는 한국임시정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중국국민정부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8년 7월 창사(長沙)에 있던 한국임시정부가 광저우(廣州)로 피난할 때, 김구가 후난성(湖南省) 장즈중(張治中) 주석을 찾아가 경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즈중이 “專車 一列을 無料로 供給”했다.¹³⁾ 또한, 1939년 10월 13일 김구와 박찬익이 충칭(重慶) 외곽에 있는 土橋에 한국임시정부 가족을 정착시키고자 中國國民政府 賑濟委員會에 주택건축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국민정부에서 22,520원을 지원했다.¹⁴⁾ 이외에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직후, 송메이링(宋美齡)이 조직한 中國婦女慰勞自衛抗戰壯士總會에서 한국광복군 장병들을 위해 100,000원의 특별 위조금을 지원했다.¹⁵⁾ 이러한 사례는 중국국민정부가 정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취한 지원 형태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부터 중국국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그해 12월 10일 김구가 중국국민당 중앙당부를 직접 방문해 주자화(朱家驊)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매달 60,000원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자화는 그 즉시 장제스(蔣介石)에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고,¹⁶⁾ 이에 장제스가 12월 17일 매달 60,000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¹⁷⁾ 60,000원에는 한국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경비와 충칭에 사는 한국교포의 생활비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¹⁸⁾ 이로써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에 매달 60,000원의 보조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중국국민정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한 보조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그 주된 이유는 물가가 계속 폭등함에 따라 한국임시정부에서 수시로 보조비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942년 12월 11일 김구가 주자화에게 매달 지급하는 60,000원 이외에 140,000원을 늘려 매달 총 200,000원의 보조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¹⁹⁾ 약 5개월이 지난 1943년 5월 중국국민정부에서는 그해 6월부터 매달 200,000원의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²⁰⁾ 늘어난 보조비에는 한국임시정부의 경비와 충칭에 사는 한국교포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의 경비도 포함돼 있었다.²¹⁾ 이후에도 한국임시정부에서는 거듭 보조비 증액을 요청했다. 그

11) 「朱家驊→蔣介石(1941.12.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05~106쪽.

12) 「金九→吳鐵城(1944.01.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93쪽.

13) 「金九→洪鴻(1938.09.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307쪽.

14) 「中國國民政府 賑濟委員會→金九·朴贊翊(1939.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쪽;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 일지』, 돌베개, 2005, 381~382쪽.

15) 嚴大衛 編, 「中國抗戰與韓國革命」, 『韓民(中文版)』 第1卷 第5期(1941.06.15), 韓民月刊社, 5쪽; 김구 저·도진순 주해, 위의 책, 384쪽.

16) 「朱家驊→蔣介石(1941.12.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05~106쪽.

17) 「蔣介石→朱家驊(1941.12.1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09~110쪽.

18) 「朱家驊→蔣介石(1941.12.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05~106쪽.

19) 「金九→朱家驊(1942.12.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58~159쪽.

20) 秋憲樹 編, 「吳鐵城一金奎植·金元鳳(1943.06.26)」, 『資料韓國獨立運動』 2, 1972, 217쪽; 「朱家驊→金九(1943.08.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67쪽.

21) 秋憲樹 編, 「吳鐵城一金奎植·金元鳳(1943.06.26)」, 『資料韓國獨立運動』 2, 217쪽.

렇지만 중국국민정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임시정부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보조비 형식이 아닌 차관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받으려 한 것이다. 그래서 1944년 2월 7일 김구가 주자화에게 정식으로 차관 요청을 제안하며, 매달 지급되는 200,000원의 보조비를 1,000,000원으로 늘려 차용을 신청했다.²²⁾ 주자화는 김구를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눈 뒤에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²³⁾ 실제로 한국임시정부의 차관 요청은 장제스로부터 거절당했다.²⁴⁾ 이보다 앞선 1942년 6월 9일에도 김구는 주자화에게 ‘信用借款’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²⁵⁾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차관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차관 수락이 곧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²⁶⁾

그렇다고 중국국민정부가 정기 보조비를 늘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44년 2월 8일 김구는 ‘한국문제’ 담당자인 주자화·우테청(吳鐵城)·허잉친(何應欽) 등 3명에게 각각 서신을 보내, 다시 매달 1,000,000원의 보조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²⁷⁾ 이에 대한 회답은 그해 9월 5일 김구가 장제스를 만나 1,000,000원이 아닌 2,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한국임시정부에 통보됐다. 9월 13일 김구와 박찬익이 中國國民黨 中央黨部 秘書處를 직접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서 9월부터 정기 보조비를 1,000,000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전달한 것이다.²⁸⁾ 또한, 1944년 12월 27일에도 김구가 우테청에게 정기 보조비를 2,000,000원으로 증액해달라고 부탁했다.²⁹⁾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³⁰⁾

1945년에는 한국임시정부가 2월 24일과 6월 9일에 각각 정기 보조비 증액을 요청했다. 2월 24일에는 매달 5,000,000원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6월 9일에는 매달 10,000,000원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중국국민정부는 2월 요청 건에 대해서는 4월 17일에 매달 3,000,000원의 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했다. 기존 정기 보조비에서 2,000,000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6월 요청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중국국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국민정부는 1942년 후반부터 1945년 중반까지 한국임시정부에 정기 보조비를 60,000원(1942년)→200,000원(1943년)→1,000,000원(1944년)→3,000,000원(1945년)으로 늘려 지원했다.

중국국민정부는 정기 보조비 외에 특별 보조비도 지원했다. 이것도 한국임시정부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광복군 招募·훈련 활동

22) 「金九→朱家驊(1944.02.0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96쪽.

23) 「朱家驊(1944.02.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98쪽.

24) 「蔣介石과 金九의 면담기록(1945.09.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79~280쪽.

25) 「金九→朱家驊(1942.06.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47쪽.

26) 이런 추정은 金九가 작성한 「金九→朱家驊(1942.06.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47쪽; 「金九→朱家驊(1944.02.0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196쪽 문서의 행간을 읽어보면 가능하다.

27) 「金九→吳鐵城(1944.04.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1쪽.

28) 「中國國民政府 軍事委員會 侍從室 第2處→吳鐵城(1944.09.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19쪽.

29) 「金九→吳鐵城(1944.12.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33쪽.

30) 「吳鐵城→金九(1945.01.0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35쪽.

비이다. 1945년 7월 중국국민정부에서는 저장浙江·푸젠福建·후난 등지에서 적진을 탈출한 한국청년들을 招募·훈련할 활동비로 3,000,000원을 한국임시정부에 지원했다.³¹⁾ 둘째, 한국임시정부의 환국 이후 활동비이다. 장제스는 한국임시정부 인사가 환국한 뒤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금 1억 원을 지원했다.³²⁾ 이외에도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에 재정을 지원한 사례는 더 있다.³³⁾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신속하게 지원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중일전쟁기 동안 많은 자금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³⁴⁾

Ⅲ. 한국광복군에 대한 군사 지원

1. 한국광복군 창설 승인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는 가장 먼저 군사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임시정부는 1937년 7월 난징[南京]에서 軍務部 산하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했고, 1938년 말 류저우[柳州]에서 韓國光復陳線靑年工作隊를 조직했다. 1939년 10월에는 치장[綦江]에서 軍事特派團을 조직해 ‘광복군’ 창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바로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다. 그런데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한국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활동 무대가 중국이었으므로, 반드시 중국국민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1940년 초반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에 한국광복군 창설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해 2월경 김구가 강제[康澤]·쉬언청[徐恩曾] 등 중국 측의 ‘한국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광복군’ 창설의 이점과 중국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사실을 검토한 쉬언청은 책임자인 주자화에게 중국의 항일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자화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찬성했고, 그해 3월 2일 장제스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마침내 그해 4월 11일 장제스는 주자화에게 허잉친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³⁵⁾

이후 한국광복군 창설 논의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40년 4월 16일 주자화는 장제스에게 받은 지령을 허잉친에게 전달하며, 협조를 부탁했다.³⁶⁾ 이어서 5월 5일 허잉친이 한국광복군의 편성과 활동 구역 등에

31) 「金九→吳鐵城(1945.06.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53~254쪽; 「吳鐵城→金九(1945.07.2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59쪽.

32) 「吳鐵城→金九(1문45.10.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87쪽; 「吳鐵城→金九(1945.11.0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94쪽.

33) 任秋山, 앞의 논문, 1975, 142~158쪽 참조.

34) 抗日戰爭期 韓國臨時政府의 재정 수입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정 수입의 평균 50퍼센트 이상이 中國國民政府에서 지원한 것이었다고 한다(윤대원, 앞의 논문, 284쪽).

35) 한시준, 「해제: 韓國光復軍 I」,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v~vi쪽.

36) 「朱家驊→何應欽(1940.04.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7쪽.

관한 잠정적인 결정 사항을 주자화에게 전달했다. 이때 장제스는 허잉친에게 ‘광복군’ 조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승인받으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장제스가 한국광복군 창설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음을 뜻한다.³⁷⁾ 이런 사실을 5월 18일 주자화가 김구에게 전달했다.³⁸⁾ 이로써 한국광복군은 정식 성립을 승인 받기 위한 최종 교섭만을 남겨 놓게 됐다.

1940년 5월 한국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중국 측에 제출했다. 그것이 바로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이하 「計劃大綱」)이다.³⁹⁾ 「計劃大綱」에 담긴 핵심 내용은 “光復軍을 편성하여 한·중연합군으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⁴⁰⁾ 이로써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군과 대등한 관계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計劃大綱」은 먼저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의 심사를 거쳤다.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수정했고, 그것을 주자화가 7월 3일 허잉친에게 넘겨 심사 결정을 요청했다.⁴¹⁾ 이것이 결정되면, 한국광복군은 중국국민정부로부터 정식 성립을 승인받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광복군은 정식 성립을 승인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국광복군의 예측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 측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韓國光復軍 總司令部’의 직할로 한다고 했지만,⁴²⁾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에서는 한국광복군이 중국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計劃大綱」의 내용을 수정했다.⁴³⁾ 한국임시정부에 우호적인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에서조차 한국광복군을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예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지원했던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중에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을 통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⁴⁾

더 이상 교섭에 진척이 없자 한국임시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940년 9월 15일 ‘大韓民國 臨時政府 主席 韓國光復軍 創設委員長’ 김구의 명의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 이튿날인 9월 17일 충칭의 嘉陵賓館에서 마침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열렸다.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의 정식 성립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내밀어 보자는 뱃심뿐이었다.”고 회고한 한국광복군 창설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이범석의 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⁴⁵⁾

한국광복군이 중국국민정부의 정식 성립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창설됐지만, 이미 장제스가 원칙적 승

37) 1941년 1월 29일 韓國光復軍 總司令部가 中國國民政府 행정원에 제출한 「節畧」을 보면, 韓國光復軍은 1940년 5월 18일 장제스로부터 성립을 批准받았다고 기록돼 있다(「韓國光復軍 總司令部→中國國民政府 行政院(1941.01.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35쪽). 1940년 5월 18일은 김구가 주자화로부터 관련 서신을 받은 날짜였다.

38) 「朱家驊→金九(1940.05.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6·14·15쪽.

39)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8~31쪽.

40) 김광재, 『韓國光復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49쪽.

41) 「朱家驊→何應欽(1940.07.0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1쪽.

42)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8쪽.

43) 「朱家驊→何應欽(1940.07.0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1쪽.

44)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一潮閣, 1993, 82쪽.

45) 韓詩俊, 위의 책, 1993, 86쪽에서 재인용.

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었다. 그러한 사실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에 중국국민정부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⁴⁶⁾ 특히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의 주자화와 우테청은 직접 행사장을 방문했고,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허잉친은 軍事委員會 辦公廳의 허우칭[侯成] 第1處長을 대리 참석시켰다. 이것은 중국국민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광복군 창설에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음을 증명해 준다. 그렇지만 한국광복군이 아직 정식 성립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국민정부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계속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임시정부에서는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교섭했다. 1941년 1월 김구와 이청천이 각각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와 中國國民政府 行政院에 한국광복군의 활동 방침을 작성한 서신을 보내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⁴⁷⁾ 협조 요청을 받은 중국 측에서는 모두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이때 한국임시정부는 기존의 ‘中國壯丁’을 한국광복군에 함께 편성한다는 방침을,⁴⁸⁾ 중국 측의 ‘參謀人員’을 한국광복군에 파견해 지도와 협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변경했다.⁴⁹⁾ 한국임시정부가 방침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1940년 겨울 각지의 군사장관들에게 通令을 내려 光復軍의 활동을 엄밀히 取締하도록”했기 때문이었다.⁵⁰⁾ 한국임시정부에서는 한국광복군이 활동하는 데 큰 장애를 받게 되자, 중국 측의 일정한 통제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⁵¹⁾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한국임시정부가 방침을 바꿈에 따라 중국국민정부도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41년 2월부터 5월까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승인 방안을 마련했다.⁵²⁾ 마침내 5월 30일 中國國民政府 軍事委員會 辦公廳의 상진[商震] 主任이 주자화에게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 문제를 장제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전달했다.⁵³⁾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軍令部·政治部·調查統計局과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의 調查統計局에서 참모와 政訓人員을 선발해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⁵⁴⁾ 하지만 승인 받은 내용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 승인을 반대하는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고,

46) 韓國光復軍 總司令部 成立典禮式에 참석해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式來賓題名」에 서명한 인물의 수는 총 134명 정도였다. 그 가운데 107명이 중국 측 인사였으며, 27명이 서양 측 인사였다. 107명의 중국 측 인사 가운데 거의 절반이 中國國民政府 인사에 해당했다(李鮮子, 「韓國光復軍成立典禮儀式來賓簽名簿探究」, 『大連近代史研究』 11, 大連市近代史研究所·旅順日俄監獄旧址博物館, 2014 참조).

47) 「金九→朱家驊(1941.01.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33~34쪽; 「韓國光復軍 總司令部→中國國民政府 行政院(1941.01.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35쪽.

48)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2쪽.

49) 「韓國光復軍 總司令部→中國國民政府 行政院(1941.01.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36쪽.

50) 한시준, 「해제: 韓國光復軍 I」,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viii~ix쪽.

51) 한시준, 「해제: 韓國光復軍 I」,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ix쪽.

52) 한시준, 「해제: 韓國光復軍 I」,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x~xi쪽.

53) 「商震→朱家驊(1941.05.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80쪽; 「姚琮→朱家驊(1941.06.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82쪽. 金九는 1941년 5월 28일에 “中國에 蔣委員長으로붙어 韓國光復軍을 韓國國軍으로 認證하는 命令이 發佈되었”다고 말했다(「金九→金孚(1941.06.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 72쪽).

54) 「商震朱→家驊(1941.05.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80쪽.

다른 하나는 중국 측이 한국광복군을 국제법상 동맹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⁵⁵⁾ 이로써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 문제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 문제는 1941년 말 장제스의 최종 지시로 일단락됐다. 그해 10월 30일 장제스가 허잉친에게 “韓國光復軍과 朝鮮義勇隊를 동시에 軍事委員會에 예속케 하고, 참모총장이 직접 통일 장악하여 운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⁵⁶⁾ 장제스가 이런 지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해 3월에서 7월 사이에 조선의용대 대원 대부분이 중국공산당의 관할 지역인 화베이[華北]로 무단이탈했기 때문이었다.⁵⁷⁾ 장제스의 지시를 받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그해 11월 13일 「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하 「九個準繩」)을 작성했고, 그것을 11월 15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로 보냈다.⁵⁸⁾ 「九個準繩」은 중국국민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의 정식 성립을 승인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임시정부는 11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九個準繩」을 받아들여기로 결의했다.⁵⁹⁾ 이로써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된 지 1년 2개월 만에 한국광복군은 중국국민정부로부터 정식 성립을 승인받게 됐다.

2. 한국광복군 통제와 지원

한국임시정부가 받아들인 「九個準繩」은 한국광복군이 지켜야 할 9가지 행동 규칙을 말한다. 문서의 이름에서부터 한국광복군을 통제한다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개의 조항이 모두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놓았다.⁶⁰⁾ 특히 제1항에 “한국광복군은 우리나라(중국-필자) 항일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접 예속되며, 참모총장이 운용을 장악한다.”고 명시했다.⁶¹⁾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직접 예속돼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가했다. 첫째, 한국광복군의 機構를 대폭 축소해 버렸다.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九個準繩」을 작성하면서, 「韓國光復軍總司令部暫行編制表」도 함께 작성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機構를 임의로 확정했다. 총사령과 참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그 밑에 參謀處·總務處·政訓處 등 총 3개의 處를 설치했다. 이것은 한국광복군이 계획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한국임시정부는 원래 총사령과 참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그 밑에 祕書處·參謀處·副官處·政訓處·管理處·編鍊處·砲工兵處·經理處·軍法處·衛生處 등 총 10개의 處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處의 수를 7개나 줄인 것이다. 이외에 단위부대인 支隊도 4개에서 2개로 축소해 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을 더욱더 쉽게 통제하려고 한 것이다.⁶²⁾

55) 「韓國光復軍 정식 성립에 관한 侯成의 答復내용(1941.06.1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84~85쪽.

56) 韓詩俊, 앞의 책, 1993, 108쪽.

57) 韓詩俊, 위의 책, 1993, 108쪽; 연인호, 『朝鮮義勇隊·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03~122쪽.

58) 韓詩俊, 위의 책, 1993, 109쪽.

59) 韓詩俊, 위의 책, 1993, 112쪽.

60) 全文은 「軍事委員會辦公廳三十年十一月十三日辦一參字第18066號代電抄件(1941.11.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56~257쪽 참조.

61) 「軍事委員會辦公廳三十年十一月十三日辦一參字第18066號代電抄件(1941.11.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56쪽.

둘째, 중국군 장교들을 대거 파견해 한국광복군을 장악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과 나중에 증설된 부사령에는 한국인이 선임됐지만, 참모장을 비롯해 각 處의 주요 간부는 대다수가 중국군 장교들로 구성됐다. 1942년부터 「九個準繩」이 폐지되는 1944년까지 한국광복군에서 중국인 장교들이 파견근무를 했다. 1945년 4월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장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명의 장교 가운데 한국인이 13명·중국인이 43명이었다. 중국군 장교의 비율이 75퍼센트가 넘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중국군 장교가 거의 다 장악함으로써,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을 중국군의 支援軍 또는 雇用軍으로 격하시켜 버린 것이다.⁶²⁾ 심지어 “한국의 光復軍이 아니라 중국의 光復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었다.⁶⁴⁾

셋째, 한국광복군과 갈등 관계에 있던 조선의용대를 지원해 내부 분열을 더 악화시켰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사조직이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1940년 말 한국임시정부로 통합됐지만, 조선의용대는 아직까지 한국광복군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조선의용대가 1938년 설립될 당시부터 한국광복군 보다 먼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예속돼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보다 조선의용대를 더 지지했다. 한국임시정부가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통합하려고 할 때,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김원봉의 의견을 반영해 압력을 행사했다. 기존 한국광복군 편제에 없던 부사령의 직책을 새로 증설해 김원봉을 그 자리에 임명했고,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한국광복군 第1支隊에 편성한 것이다.⁶⁵⁾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통합됐지만,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를 옹호함으로써 기존 한국광복군 인사와 조선의용대 인사 사이의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⁶⁶⁾

그렇다고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을 통제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통제하는 조건으로 약간의 軍費를 지원한 것이다. 「九個準繩」을 한국임시정부에서 받아들인 직후부터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매월 20,000원씩 보조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⁶⁷⁾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한국광복군이 기본 「衣食」을 해결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사 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⁶⁸⁾ 한국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九個準繩」을 받아들였지만, 그에 따른 중국 측의 지원은 기대에 못 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임시정부는 「九個準繩」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국임시정부는 1942년 10월 열린 제34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九個準繩」 폐지를 논의했고, 1943년 2월 20일 조소앙 외무부장의 명의로 「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廢止提議書」를 작성해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에 정식 제출했다. 이때 「九個準繩」을 대신할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을 함께 첨부했다. 중국국민정부 외교부

62) 韓詩俊, 앞의 책, 1993, 115~117쪽.

63) 韓詩俊, 위의 책, 1993, 118~120쪽.

64) 「임시정부의 '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 폐지 제의서(1943.02.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42쪽.

65)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41쪽.

66) 「金九→朱家驊(1942.05.0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 20쪽; 「朱家驊→金九(1942.09.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31쪽.

67) 「韓國光復軍成立經過事實(1943.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58쪽.

68) 「關於韓國光復軍最近情形(1942.02.0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114쪽.

에서는 한국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문서의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九個準繩」 폐지에 관한 내용은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도 전달됐고, 오랜 논의를 거쳐 1944년 9월에 이르러서야 「九個準繩」은 폐지됐다.⁶⁹⁾

1945년 초에는 「九個準繩」을 대신할 새로운 군사협정이 체결됐다. 그해 3월 9일 장제스가 최종 결재한 「援助韓國光復軍辦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건은 그해 4월 4일 한국임시정부에 전달됐고,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내용의 핵심은 한국광복군을 한국임시정부 소속으로 되돌려 주고, 한국광복군의 軍費를 한국임시정부에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임시정부가 중국 측에 제출했던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關於韓國光復軍換文草案」·「爲韓國光復軍當面要求條件」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한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되찾게 됐다. 또한, 한국광복군에 대한 중국 측의 지원도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⁷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한국임시정부의 반발과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독립의 가능성이 더욱더 가시화됐기 때문이었다.

IV. 한국의 국제지위 확보에 대한 외교 지원

1. 한국임시정부 승인 지지와 유보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는 군사문제 못지않게 외교문제도 중요시했다. 외교문제의 핵심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한국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의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된 1941년 중반부터, 외무부를 통해서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⁷¹⁾ 그해 5월과 7월 중에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함을 보냈고, 10월 3일에는 김구와 조소앙이 중국국민정부의 귀타이치(郭泰祺) 外交部長을 만나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로 “初次의 會商을 開하였”다.⁷²⁾

이때 한국임시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귀타이치가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英美兩國 政府와 協商하고, 日間에 自己(중국국민정부- 필자) 國務會議에 제출하겠다.”고 聲明한 것이다.⁷³⁾ 한

69) 韓詩俊, 앞의 책, 1993, 124~133쪽.

70) 韓詩俊, 위의 책, 1993, 133~138쪽.

71) 「臨時議政院會議 第33回 會議議事錄(1941.10.1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17쪽. 中國國民政府 外交部가 남긴 자료에는 韓國臨時政府 外務部가 아닌 ‘朝鮮(韓國- 필자)臨時政府 議政院’에서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韓國獨立運動經過情形」,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274쪽). 이 글에서는 韓國臨時政府의 기록에 따랐다.

72) 「臨時議政院會議 第33回 會議議事錄(1941.10.1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17쪽; 「外務報告書(1942.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2007, 48쪽.

7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李始榮-金孚(1941.10.17)」, <http://search.i815.or.kr/ImageViewer/ImageViewer.jsp?tid=co&id=1-A00885-000>(검색일 : 2015.06.03).

국임시정부는 중국이 만일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미·영·소 3국 등도 이어서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임시정부는 먼저 중국국민정부를 상대로 ‘(韓國)臨時政府 承認問題運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⁷⁴⁾ 이후 한국임시정부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측에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맞추어 중국국민정부도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검토했다.

첫째,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이다. 1941년 12월 10일 한국임시정부는 「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했다. 한국임시정부는 그 즉시 성명서를 중국국민정부와 충칭에 주재한 각국 대사관에 직접 전달하며,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주미외교위원부의 이승만을 통해 미국정부와도 교섭을 시도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도 비로소 ‘한국문제’와 한국임시정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⁷⁵⁾ 이렇게 되자 평소에 한국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중국국민정부에서도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국민정부에서는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41년 11월 21일에 國策諮問機關인 國民參政會의 타오싱즈(陶行知·후추위안(胡秋原) 등 21명의 參政員들이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중국국민정부에 공식 제출한 적이 있었다.⁷⁶⁾ 또한,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에는 주자화가 장제스에게 직접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제기했었고,⁷⁷⁾ 1942년 3월 22일에는 中國國民政府 쑨커(孫科)立法院長이 東方文化協會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⁷⁸⁾ 이뿐만 아니라 1942년 4월 6일에는 中國國民政府 國防最高委員會 常務會議에서 역시 쑨커의 제안으로, 한국임시정부 성립 23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에 맞추어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⁷⁹⁾ 이에 따라 중국국민정부 외교부는 당시 미국 측에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⁸⁰⁾

그러나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최고 결정권자인 장제스가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장제스는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미국과 상의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해야만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⁸¹⁾ 이처럼 장제스는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미국의 협조 없이, 중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저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측은 한국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단체도 승인할 뜻이 없음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 결국, 장제스가 한국임시정부 승인

74) 「臨時議政院會議 第33回 會議議事錄(1941.10.1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17쪽.

75) 미국의 「韓國臨時政府 承認問題」에 대한 내용은 고정휴,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불승인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516~521쪽 참조.

76) 「中國國民政府 行政院 秘書處→中國國民政府 外交部(1942.02.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94~96쪽; 「韓國獨立運動經過情形」,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275쪽.

77) 「朱家驊→蔣介石(1942.06.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99쪽.

78) 「孫院長講演 韓國獨立問題」, 『新華日報』, 1942년 3월 23일자.

79) 김영신 편역, 「王寵惠→蔣介石(1942.04.06)」, 『蔣中正總統檔案 중 한국관련자료 輯譯』, 선인, 2011, 68~69쪽.

80) 고정휴, 앞의 논문, 2003, 517쪽.

81) 「蔣介石→王寵惠(1942.04.0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50쪽.

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미국 측의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⁸²⁾

이때 장제스가 결정한 한국임시정부 승인 유보에 대한 태도는 이후 중국국민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졌다. 1942년 말부터 시행된 「扶助朝鮮復國運動指導方案」에 그런 사실이 명문화된 것이다. 한국독립운동 지원 방법의 첫 번째 항목에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됐다. “적당한 시기에 타국보다 먼저 韓國臨時政府를 승인하며 그 手續과 유리한 時機는 指導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건의, 總裁의 지시로 外交部가 처리한다.”⁸³⁾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는 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부터 중국국민정부에서는 이 방침에 근거해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처리했다.

둘째, 카이로선언 발표 직후이다. 1943년 12월 1일 미·영·중 3국 영수가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한국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됐다. 따라서 한국임시정부는 ‘한국문제’가 주목받게 된 당시의 국제정세를 이용해 한국임시정부의 승인 요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임시정부는 1944년 4월 완전한 ‘좌우연합정부’를 조직한 뒤,⁸⁴⁾ 그 즉시 중국국민정부에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먼저 한국임시정부는 5월 21일 충칭에서 개막된 ‘中國國民黨 第十二中全會’에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비망록을 작성해서 보냈다.⁸⁵⁾ 이어서 6월 21에는 김구의 명의로 장제스에게 보내는 한국임시정부 승인 요청에 관한 성명서와 비망록을 작성했고, 이것을 6월 29일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에 정식 제출했다.⁸⁶⁾ 이와 동시에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의 黨·政·軍 각계 인사를 직접 만나 한국임시정부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 力說했다.⁸⁷⁾

한국임시정부의 요청에 중국국민정부도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에서 6월 29일 접수한 김구 명의의 성명서와 비망록을 7월 15일 장제스에게 전달하며,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⁸⁸⁾ 이때 중국국민정부 외교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하나는 미·영 두 나라가 여전히 한국임시정부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기구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소련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의견을 보고받은 장제스는 8월 14일 중국국민정부 외교부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잠시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⁸⁹⁾ 이것은 장제스가 처음부터 정해놓은 한국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를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

82) 고정휴, 앞의 논문, 2003, 517쪽.

83) 胡春惠 著·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檀國大學校出版部, 1978, 100쪽.

84) 한시준, 앞의 책, 2009, 59~63쪽.

85) 「外務部六月份工作報告(1944.06.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20쪽.

86) 「金九-蔣介石(1944.06.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5~206쪽; 「中國國民政府 外交部-蔣介石(1944.07.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13쪽.

87) 「外務部六月份工作報告(1944.06.30)」·「外務部七月份工作報告(1944.07.31)」·「外務部八月份工作報告(1944.08.3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70·75·78쪽.

88) 「中國國民政府 外交部-蔣介石(1944.07.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13~115쪽; 「蔣介石-中國國民政府 外交部(1944.08.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17쪽. 中國國民政府 外交部는 관련 문서를 7월 12일 작성해서 7월 15일에 장제스에게 제출했다.

89) 「蔣介石-中國國民政府 外交部(1944.08.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17쪽.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4년 7월에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에서는 “承認하자는 原則은 通過되었다.”고 했고, 중국국민정부 국방최고위원회 왕충후이(王寵惠 祕書長)는 “法律上 承認은 英美의 同意와 法的 手續을 經過해야 되고, 事實上 承認은 임이 되었다.”고 말했다.⁹⁰⁾ 둘째, 그해 9월 10일 중국의 국민참정회가 제3기 제3차대회를 개최할 때 한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을 정식 외빈 자격으로 초청했고, 이 때 후츄위안의 제안으로 194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임시정부 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⁹¹⁾ 이러한 중국국민정부의 태도 변화는 왕충후이의 말대로 한국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1944년부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그해 4월 한국임시정부가 완전한 ‘좌우연합정부’를 조직함에 따라 중국국민정부는 더 이상 한국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문제를 구실로 한국임시정부 승인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일제의 패망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한국임시정부를 전후 독립된 한국의 지도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⁹²⁾ 이처럼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유보했다. 중국국민정부가 지지와 유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체 역량의 부족 때문이었다. 비록 중국 측이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끝까지 유보했지만, 국제사회와 일반 여론에 한국임시정부의 존재와 중요성을 선전한 공도 적지 않았다.

2. 한국독립 승인 주장과 좌절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한 것이 ‘한국독립 승인문제’였다. ‘한국독립 승인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였다. 1942년 4월 1일부터 미국의 발의로 열린 ‘太平洋軍事會議’에서 루스벨트가 중국국민정부의 쑹쯔원(宋子文 外交部長)을 초청해 ‘한국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때 루스벨트는 ‘태평양군사회의’에 참가한 각국이 공동 또는 미·중 두 나라만이라도 ‘한국독립’을 주장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데 중국이 찬성하는 지 그 의견을 물었다.⁹³⁾ 이 내용을 쑹쯔원은 장제스에게 곧바로 보고했고, 장제스는 4월 4일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허잉친에게 관련 사안을 막료회의에서 토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⁹⁴⁾ 4월 11일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막료회의 결과를 장제스에게 보고했다. 그 결과는 ‘찬성’한다는 것이었다.⁹⁵⁾

실제로 루스벨트가 쑹쯔원과 ‘한국독립 승인문제’를 논의한 것은 1942년 4월 15일 열린 회의에서였다. 이

90) 「外務部七月份工作報告(1944.07.31)」·「外務部八月份工作報告(1944.08.3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75·78쪽.

91) 「外務部九月份工作報告(1944.09.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83쪽; 「中國國民政府 行政院 祕書處—中國國民政府 外交部(1944.12.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97~98쪽.

92) 「韓國問題討論會紀錄(1944.10.3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5~126쪽; 「吳鐵城—蔣介石(1944.10.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7쪽.

93) 「宋子文—蔣介石(1942.04.0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48~49·104~105쪽.

94) 「蔣介石—何應欽(1942.04.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49·106쪽.

95) 「徐永昌—蔣介石(1942.04.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51·109쪽.

때 루스벨트는 ‘한국독립 승인문제’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했다. 그 이유는 ‘印度問題’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일제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때에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⁹⁶⁾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에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국민정부는 ‘한국독립 승인문제’가 아니라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놓고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문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는 ‘한국독립 승인문제’가 전제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였다. 그런데 미국 측은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국민정부가 당연시 여기고 있던 ‘한국독립 승인문제’를 중국 측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그 이후의 ‘한국문제’가 전개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보다, ‘한국독립 승인문제’가 더 우선시 됐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독립 승인문제’가 전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신탁통치에 해당하는 ‘國際共管’⁹⁷⁾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태평양군사회의’가 열린 1942년 4월부터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⁹⁸⁾ 전후 한국의 ‘국제공관’ 문제는 1943년 3월 27일 루스벨트와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外相이 회담을 했을 때 협의를 거쳐 공식 방침으로 결정됐다.⁹⁹⁾

한국임시정부는 전후 한국의 ‘국제공관’ 문제가 대두되자 곧바로 대응했다. 1943년 2월 1일 한국임시정부에서는 이미 조소앙 외무부장의 명의로 전후 한국의 ‘국제공관’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4월에 접하게 된 소식은 미·영의 공식적인 방침이었기 때문에, 한국임시정부는 더욱더 조직적으로 대처했다. 4월 29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 사항을 결의한 것이다.¹⁰⁰⁾ 그 가운데 특히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에 사실 유무를 질문하고, 정식으로 반대의를 표명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5월 6일 한국임시정부 외무부의 신익희 次長이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의 우귀전(吳國楨) 次長을 만나 중국 측의 태도를 탐문했다. 우귀전은 자신이 대답할 권한이 없다며 답변을 거절했다.¹⁰¹⁾

중국국민정부 외교부의 반응이 냉담하자 한국임시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장제스와 직접 만나 전후 한국의 ‘국제공관’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견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7월 26일 오전 9시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2층 응접실에서 한국임시정부의 김구(주석)·조소앙(외무부장)·김규식(선전부장)·이청천(광복군 총사령)·김원봉(광복군 부사령) 등 5명이 장제스와 면담을 했다. 한국 측의 安原生이 통역을 맡았고, 중국 측의 우테청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때 나눈 대화의 내용은 「總裁接

96) 『宋子文—蔣介石(1942.04.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52·112쪽. 52쪽의 한국어 번역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이라고 돼 있지만, 112쪽의 중국어 원문에는 ‘承認朝鮮獨立’이라고 돼 있다. 원문에 기록된 용어도 그렇지만, 내용의 정확성을 따져 봐도 ‘韓國獨立 承認’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97) 韓國臨時政府에서는 중국 신문에 보도된 ‘國際監護’라는 용어를 ‘國譯’해 ‘國際共管’이라고 표현했다(『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8號(1943.08.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90·277쪽). 이 글에서는 韓國臨時政府가 사용한 ‘國際共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8) 『(重慶·天津)大公報』 1943년 2월 1일자,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韓國外務部長 趙素昂)」.

99) 이 사실이 충청에 알려지게 된 날짜는 1943년 4월이었다(한시준, 앞의 논문, 2014, 130쪽).

100)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8號(1943.08.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90·277쪽 참조.

101)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안 반대운동(1942~19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82쪽.

見韓國領袖談話紀要」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총재 : 중국혁명의 최종목적은 한국과 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혁명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조국광복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구·조소앙 : 전후 한국의 지위문제에 대해 영국과 미국은 국제공동관리와 유사한 방법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방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의 독립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국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총재 : 영국과 미국방면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의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단결통일과 더불어 실제 공작방면에서도 뭔가 내세울만한 성과가 필요할 것입니다.¹⁰²⁾

이 기록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 준다. ① 장제스가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돕는 데 있다고 말한 것, ② 한국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장제스에게 ‘국제공관’을 주장하는 미·영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주장을 관철하여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 ③ 장제스가 ‘국제공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미·영과 논쟁이 많을 테지만, 한국독립을 위해 ‘力爭’하겠다고 확언한 것, ④ 장제스가 한국독립을 주장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부의 통일과 工作 실현을 권고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제스의 발언은 결코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장제스가 관련 사실을 면담 당일에 작성한 ‘일기’에도 그대로 기록해 뒀기 때문이다.¹⁰³⁾ 이로써 장제스는 훗날 있을 미·영과의 협상에서 ‘한국독립 승인’을 주장하겠다고 한국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¹⁰⁴⁾

장제스가 염두에 둔 ‘협상’은 바로 ‘카이로회담’이었다. 카이로회담의 개최가 최종 확정된 것은 1943년 11월 8일이었고, 회담이 실제로 진행된 것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였다. 그렇지만 루스벨트와 장제스 사이에서 회담 교섭이 성사된 것은 그보다 빠른 7월 8일이었다.¹⁰⁵⁾ 한국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장제스가 면담한 날짜가 7월 26일이었으니, 이들의 면담이 카이로회담을 겨냥하고 진행된 것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제스는 카이로회담을 준비하면서, 면담에서 밝힌 ‘한국독립 승인’에 대한 주장을 중국국민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채택했다.

중국국민정부가 카이로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943년 11월 14일을 전후한 시점부터였다. 이때 軍事委員會 參事室과 國防最高委員會 祕書廳이 카이로회담에서 제안할 방안을 마련했다. 각각 「關於開羅會議中我方應提出之問題草案」과 「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

102)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1943.07.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39쪽.

103) 이상철, 「〈蔣介石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7쪽; 秦孝儀 總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5(上), 中正文教基金會, 1978, 346쪽.

104) 한시준, 앞의 논문, 2014, 139쪽.

105) 카이로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7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참조.

合作等三種方案」을 작성한 것이다. 바로 이 두 문서의 정치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모두 “조선독립을 승인한다 [承認朝鮮獨立].”는 문구가 명문화돼 있었다.¹⁰⁶⁾ 또한, 11월 18일 장제스는 회담이 열릴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는 여정 중에 기록한 일기에서 “朝鮮獨立” 문제를 회담에서 논의할 7가지 중대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었다.¹⁰⁷⁾ 당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영도 카이로회담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런데 미·영·중 3국 가운데 ‘한국독립 승인문제’를 회담에서 논의할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중국이 유일했다.¹⁰⁸⁾

중국국민정부는 ‘한국독립 승인’을 제안·주장한다는 방침을 카이로회담에서 그대로 이행했다. 먼저 본회의가 열린 1943년 11월 23일 오전 왕충후이와 귀빈재郭斌圭가 사전에 입안한 정치문제에 관한 제안을 영문으로 번역해 장제스에게 보고했다. 그 가운데 ‘遠東에 관한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영국과 함께 “조선이 전후에 자유와 독립을 회복(重建)하도록 승인한다.”고 약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¹⁰⁹⁾ 이러한 내용을 장제스가 그날 저녁 8시경 열린 루스벨트와의 만찬회동에서 직접 제안했다. 이때 루스벨트도 장제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이 패배한 후 조선은 자유와 독립을 획득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¹¹⁰⁾ 루스벨트는 만찬회동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동석했던 홉킨스(Harry L. Hopkins) 특별보좌관에게 토론 내용에 의거해 선언문을 기초하라고 지시를 내렸다.¹¹¹⁾ 홉킨스는 이튿날 오후에 「카이로선언」의 초안을 작성했고, 그 즉시 루스벨트의 검토를 거쳤다. 바로 이렇게 작성된 「카이로선언」의 초안에 전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¹¹²⁾ 이것은 장제스가 루스벨트에게 ‘한국독립 승인문제’를 특별히 환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¹¹³⁾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카이로회담의 마지막 날인 1943년 11월 26일 오후 「카이로선언」을 최종 채택하는 과정에서, 영국 측이 「카이로선언」 초안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영국 측은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를 임의로 수정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가운데 ‘한국독립 승인’에 관한 문구도 포함됐다. 영국 측은 「카이로선언」 초안의 “우리는 조선이 하나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결정한다.”를 “우리는 조선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결정한다.”로 바꿔버렸다. 심지어 영국 측은 ‘한국’에 관한 모든 문구를 삭제하기를 원했다.¹¹⁴⁾ 이것은 영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대놓고 반대한 것이었다.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자국의 식민지인 인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06) 秦孝儀 主編, 「軍事委員會參事室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中我方應提出之問題草案(1943.11)」, 499쪽;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1943.11)」, 504쪽.

107) 秦孝儀 總編, 앞의 책, 1978, 432쪽. 장제스는 카이로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43년 11월 22일 밤 기록한 일기에도 “전후 조선독립에 관한 문제를 회담에서 심의해야 할 제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었다(이상철, 「장제스 일기로 본 카이로 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단국대학교·광복회·독립기념관, 2014, 51쪽).

108) 조덕진, 앞의 논문, 2014, 146~149쪽 참조.

109)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6~527쪽.

110)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8쪽.

111)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8쪽.

112)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107, 역사비평사, 2014, 328~331쪽.

113) 이상철, 앞의 논문, 2014, 52쪽.

114)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9~530쪽.

이 문제를 놓고 영국의 캐도건(Alexander Cadogan) 外務次官과 중국의 왕충후이가 설전을 벌였다. 먼저 왕충후이가 영국 측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했다. 왕충후이는 “조선은 원래 일본의 침략으로 병탄되었으며, 일본의 대륙정책이 곧 조선의 병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리 높여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장래에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이야 말로 장래 (한국의) 자유와 독립의 지위를 결정할 적합한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¹¹⁵⁾ 이러한 왕충후이의 주장에 대해 캐도건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조선문제에 관해서는 영국 내각이 먼저 토론하지 못했다.……또한,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와 반응을 사전에 교섭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마땅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수정안대로 고칠 수 없다면, (한국 관련) 전문全段을 삭제하는 편이 낫겠다.”¹¹⁶⁾ 이처럼 중국 측은 「카이로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문구를 삽입해야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영국 측은 그러한 문구를 아예 삭제해 버리려고 했다.

중국과 영국 측의 논쟁은 미국 측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해리먼(William A. Harriman) 駐소련 미국대사가 루스벨트의 견해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소련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소련과 반드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¹¹⁷⁾ 그 결과 「카이로선언」은 원래 초안의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로써 미·영·중 3국은 「카이로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아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된 「카이로선언」은 12월 1일 공포됐고, 그 내용 가운데 「한국독립 승인문제」는 다음과 같이 포함됐다. “이상에서 말한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적 생활을 주의하여, 당연한 순서에 따라 한국이 반드시 자유 되며, 독립 되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¹¹⁸⁾ ‘당연한 순서’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카이로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았다.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이 독립을 보장받게 된 데에는 중국 측의 역할이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측은 왜 이토록 한국의 독립 승인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한국이 있어야만 중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¹⁹⁾ 둘째, 한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²⁰⁾ 셋째, 한국임시정부의 존재와 활동이 중국 측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¹²¹⁾ 이 가운데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구인 한국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중국

115)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2쪽.

116)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2쪽.

117)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2쪽.

118)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신한민보별보》, 1943년 12월 2일자. 영어 원문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inal Text of the Communique: Press Communiqu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449; 중국어 원문은 秦孝儀 主編, 「蔣委員長與美國總統羅斯福·英國首相邱吉爾在開羅聯合發表對日作戰之目的與決心之公報(1943.11.27)」, 547쪽 참조.

119)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2쪽.

120)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1943.11)」, 504~505쪽.

121)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1943.11)」, 504~505쪽.

이 ‘한국독립 승인’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독립 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역할과 그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¹²²⁾

카이로회담 이후에도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견지했다. 1944년 9월 충칭 주재 미국대사와 영국대사가 미·영·중 3국이 함께 ‘한국문제’를 공동연구하자고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한 일이 있었다.¹²³⁾ 이때 장제스는 왕충후이·송쯔원·왕스제(王世杰) 등에게 관련 문제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일렀다. 한국의 조속한 독립을 주장하는 중국 측의 기존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과 한국에 ‘국제공관’ 방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장제스가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韓國人士(한국임시정부 인사-필자)’와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東三省’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¹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한국독립 승인문제’는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체 역량이 미약했던 중국이 미·영의 협조와 동의 없이 ‘한국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45년 2월과 12월에 각각 열린 알타회담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주도적으로 전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국제적 발언권이 미약했던 중국은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한국독립 승인’ 주장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국민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실상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에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재정 지원 요청에 호응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한국임시정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중국국민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부터는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

122)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1943.07.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38~240쪽;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1943.11)」, 504~505쪽 참조.

123) 배정환,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287쪽.

124) 「蔣介石—宋子文(1944.10.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306~307쪽.

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달 정기적으로 보조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942년 후반부터 1945년 중반까지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에 매년 보조비를 증액해 지원했다. 이러한 정기 보조비 외에 한국임시정부가 특별 요청한 보조비도 지원했다.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신속하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중일전쟁기 동안 많은 자금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둘째, 한국광복군에 대한 군사 지원이다.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는 가장 먼저 군사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한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런데 중국국민정부는 한국광복군의 예속 문제로 정식 성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1941년 말 한국임시정부가 중국 측이 제시한 「九個準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九個準繩」의 주요 골자는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을 직접 통제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九個準繩」에 따른 중국국민정부의 통제적 지원 정책은 1945년 초 새로운 군사협정인 「援助韓國光復軍辦法」을 제정해 전면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중국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한국임시정부의 반발과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독립의 가능성이 더욱더 가시화됐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국국민정부는 한국광복군을 ‘통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대했다.

셋째, 한국의 국제지위 확보에 대한 외교 지원이다. 중일전쟁기 한국임시정부는 군사문제 못지않게 외교 문제도 중요시했다. 외교문제의 핵심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임시정부는 최대 우방으로 인식된 중국을 상대로 교섭을 벌였다. 중국국민정부도 한국임시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국제사회에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 승인’을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뜻을 펼쳤다. 그러나 자체 역량이 미약했던 중국국민정부는 미·영의 협조와 동의 없이 ‘한국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 승인’에 대한 지지와 주장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국민정부의 외교 지원은 한국의 국제지위 확보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는 자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재정·군사·외교 지원에 관한 실상이 그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국민정부의 지원이 모두 한국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중국국민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고, 중국국민정부도 그러한 요청에 호응함으로써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국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임시정부는 중일전쟁기 동안 큰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운영될 수 있었다.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근대 한·중관계’·‘한·중 공동항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한다.

〈참고문헌〉

『(重慶)大公報』·『신한민보별보』·『新華日報』·『韓民(中文版)』

김영신 편역, 『蔣中正總統檔案 중 한국관련자료 輯譯』, 선인,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10·11·16·19·22·25·42, 국사편찬위원회, 2005·2007·2008·2011.

秋憲樹 編, 『資料韓國獨立運動』 1·2,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1972.

秦孝儀 總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5(上), 中正文教基金會, 1978.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김광재, 『韓國光復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5.

고정휴,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불승인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염인호, 『朝鮮義勇隊·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후반기(1932~1945)의 재정제도와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이상철, 「〈蔣介石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이상철, 「장제스 일기로 본 카이로 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단국대학교·광복회·독립기념관, 2014.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안 반대운동(1942~19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任秋山, 「大韓民國臨時政府에 對한 中華民國의 支援政策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107, 역사비평사, 2014.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7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一潮閣, 1993.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胡春惠 著·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檀國大學校出版部, 1978.

李鮮子, 「韩国光復軍成立典禮儀式來賓簽名簿探究」, 『大連近代史研究』 11, 大連市近代史研究所·旅順日俄監獄旧址博物館, 20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李始榮-金孚(1941.10.17.)」, <http://search.i815.or.kr/ImageViewer/ImageViewer.jsp?tid=co&id=1-A00885-000>(검색일 : 2015.06.03).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Suppor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Cho, Deokcheon*

This study has solidly organized the suppor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financial, military and diplomatic supports, which were the key parts among the various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First, referring to financial aid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id not accept all the requests for funds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nor did it help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ith funds promptly. However, it was really tru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provided a large amount of money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Second, in terms of military matter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conducted the dual policies of ‘controlling and supporting’ the Liberation Army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Third, in relation to diplomatic matter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backed up or insisted on ‘the approval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ccreditatio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ough it could not realize such agendas due to its lack of power. In short,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ctively responded to the requests from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espite its lack of power, and provided financial, military and diplomatic supports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This clear fact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the early modern Korea-China relationships, and the Korea-China Joint Anti-Japanese War.

[Key Words] Sino-Japanese War, Independence Movement, Korea-China Joint Anti-Japanese War,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 Senior Advance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Fudan University

